

#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

이근식(서울시립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현재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민들이 소위 진보와 보수 두 진영으로 갈라져서 상대방을 증오•멸시하기가 극단적이다. 해방 직후 보다는 덜 하겠지만 필자의 기억으로 6.25 이후 요즘만큼 양 진영간의 상호 증오가 심한 적은 없었던 것 같다. 또한 자살률은 세계 최고인 반면, 출산율은 세계 최저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세계적인 스태그플레이션(불황과 인플레이의 병행)이 앞으로 어디까지 악화될지 모르겠다.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이런 현재의 우리나라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I. 과학실증주의의 극복

먼저 나의 기본 입장을 밝혀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나의 기본입장은 가치판단을 배제 하자는 과학실증주의를 거부하고 올바른 윤리의식에 입각한 가치판단을 견지한다는 것이다. 사람의 판단은 사실판단과 가치판단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제비꽃을 보고 제비꽃임을 아는 것이 사실판단이고, 제비꽃을 보고 예쁘다고 느끼는 것이 가치판단이다.<sup>1)</sup> 사실판단의 오류 여부는, 사실의 확인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반면에 가치판단은 주관적 이므로 오류를 객관적으로 판별하기가 어렵다. 취향과 이해관계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가치판단을 과학의 영역에서 배제하자는 **실증주의(positivism)**가 현대과학에 만연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당연시하고 있다. 베버(Max Weber)의 몰가치론이 대표적 예이다<sup>2)</sup>. 자신을 실증경제학(positive economics)이라고 부르는 현대 영미 주류경제학도 대체로 이런 입장이다.

과학실증주의는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기 쉽지만 실은 그릇된 주장이다. 모든 과학은 결국 인간에게 직•간접으로 실제 영향을 미치므로, 사회과학은 물론이고 자연과학에서도 가치판단을 배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뢰프케(Wilhelm Röpke)의 말과 같이, 가치판단의 배제라는 주장 자체가 실은 현실 비판을 회피하겠다는 가치판단을 내포하고 있다(Röpke, 75 쪽).

가치판단의 옳고 그름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힘들지만, 가치관 중에는 잘못된 것이 분명히 있다. 인종주의, 파시즘, 군국주의, 배금주의와 같이 윤리적으로 잘못된 가치관에 입각한 생각은 분명히 잘못되었다. 가치판단의 기준이 되는 가치관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1) 가치판단과 사실판단을 구분하는 것은 사실판단으로부터 가치판단이 도출될 수 없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Rocci.

2) 베버가 주장한 것은, 대학의 강단에서 가치판단을 배제하자는 것이지, 인간생활에서 가치판단을 배제하자는 것은 아니다. 사제지간에는 자유로운 토론이 어려워서 교수가 대학강단에서 자신의 가치판단을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입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한 장소, 예컨대 시장에서는 가치판단을 논할 수 있다고 베버는 보았다고 한다. 이 점은 베버 전공자인 전성우교수(한양대 사회학과 명예교수)가 깨우쳐 주었다.

것이다. 하나는 윤리와 상관없는 개인적 취향이나 인생목표에 관한 가치관이며, 둘은 윤리와 관련된 가치관인 윤리의식이다. 개인의 취향이나 인생목표와 같은 개인 가치관은 과학에서 따질 필요가 없다. 그러나 윤리문제와 관련된 가치판단은 이와 다르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므로 어떤 인간도 윤리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비윤리적인 목적을 위한 연구에 참여하면서 과학실증주의를 내세워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은 자기기만이자, 학상(學商)이나 학노(學奴)로 자신을 전락시키는 것이다.

윤리는 시대와 사회에 따라서 다르지만, 윤리에는 동서고금에 변하지 않는 보편적인 내용이 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지 말라는 것이요, 나아가서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도 노력하라는 것이다. 이기심을 극복하고 모두 함께 잘 살기 위하여 노력하라는 것이다. 상생의 원리도 이를 말한다. 이런 상생의 입장에 서면 사람들간의 취향이나 이해관계의 차이를 극복하고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가치판단만이 아니라 사실판단에서도 사람들은 종종 잘못을 저지른다. 이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정보가 부족하거나 사고능력(정보의 처리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을 잘못 파악하는 경우이다. 인과관계를 잘못 설명하는 것이 이러한 경우이다. 불완전한 인간이 이런 과오를 범하는 것은 종종 있는 일이다. 이는 이해관계나 편견과는 상관없이 발생하는 사실판단의 오류이다.

이런 것보다 더 조심해야 하는 것은 자신의 편견이나 이해관계 때문에 사실을 의식 혹은 무의식적으로 왜곡하는 것이다. 인식능력은 부족하고 현실은 복잡하며 정보도 부족하여 사람들은 무엇이 무엇인지 잘 알 수가 없을 때가 많다. 잘 알 수 없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편견이나 이해관계에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끌려 사실을 왜곡하여 잘못 인식하고, 잘못된 인식은 다시 잘못된 편견을 뒷받침한다.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 심지어 흰 꽃을 빨간 꽃이라고 우기기도 한다. 잘못된 가치판단과 잘못된 사실판단이 상호상승작용을 한다. 인류 역사상 큰 죄악을 저지른 사람치고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이 없고,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아도, 직업이나 교육수준에 상관없이 자신의 이익을 사회의 이익이라고 강변하면서도 자신이 틀린 줄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떠드는 소리가 천지에 가득하다.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건전한 윤리적 판단으로서의 가치판단이 아니라, 편견이나 이해관계라는 색안경을 쓰고 사물을 바라보면서 사실을 왜곡시키는 것이다.**

건전한 가치관이란, 인종, 종교, 성, 재산, 신분 등 그 어떤 이유로도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건전한 윤리의식을 말하며, 냉철한 이성이란, 자신의 편견이나 이해관계를 떠나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건전한 가치관과 냉철한 사실판단력이 합쳐졌을 때 비로소 **이성(理性)**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마셜(Alfred Marshall)은 1885년 케임브리지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취임연설에서 경제학자(economists)는 ‘찬 머리와 더운 가슴’(cool head and warm heart)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 것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이러한 이성이 인간의 가장 큰 힘이며 사회를 발전시키는 힘이다. 이성이라고 하면, 보통 인간의 사실판단력을 말하지만, 건전한 윤리의식은 사회발전에도 똑같이 중요하다.

## 2. 자유와 자유주의의 의미

자유는 여러 가지 입장에서 해석할 수 있으나 자유주의의 입장에서 자유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

첫째, 자유<sup>3)</sup>는 집단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이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유주의는 구체적 인간인 개인만이 궁극적 가치를 갖고 있다고 보는 개인주의의 입장에 서있다. 자유는 개인에 대해서만 사용되며, 국가, 민족, 계급, 회사와 같은 단체나 조직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으며 어디까지나 개인에게 적용되는 말이다.

둘째로 자유는 **사회적 자유**(social liberty)이다. 사회적 자유란 사상과 출판, 취업, 결사, 정치참여, 종교선택과 같이 개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자유를 말한다. 무지나 탐욕, 미신으로부터의 자유와 같이, 타인이나 사회와 상관없이, 개인이 혼자 스스로 처리하는 문제와 관련된 자유는 사회적 자유가 아니다. 개인의 사회적 자유를 주로 제한하는 것은, 정치권력, 종교권력, 언론권력, 신분권력과 같이 모두 사회적 권력이다. 따라서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자유는 **사회적 권력의 부당한 침해로부터의 자유**라고 볼 수 있다. 밀의 말을 빌리면, 자유란 '의지의 자유가 아니라 시민적(civil) 혹은 사회적 자유이다'(Mill, 『자유론』, p. 237).

셋째로, 자유는 협의의 자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권과 재산권을 모두 포함하는 **인권**(human rights) 전체이다. 자유는 협의의 자유와 광의의 자유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협의의 자유란 강압이 없는 자유로운 상태를 말한다. 보통 말하는 종교의 자유나 결사의 자유와 같은 선택의 자유가 이에 해당한다. 광의의 자유는 협의의 자유만이 아니라, 개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의 보장을 모두 포함한 인간의 기본권 전체를 말한다. 자유주의자들이 구체제의 강압정치에 대항하여 투쟁할 때에 기치로 내건 자유도 이러한 광의의 자유였다. 협의의 자유는 실질적으로 광의의 자유와 동일하다. 둘 모두 사회적 권력의 침해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런 개인의 사회적 자유를 가장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보는 사회사상이 **자유주의**(liberalism)이다. 이렇게 간단히 말하기에는 자유주의의 의미가 너무 풍부하고 복잡하다. 이 때문에 외국에서나 우리나라에서나 자유주의처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 이념도 드물다. 자유주의의 본 고장인 서양에서도 보수주의자와 급진개혁주의자가 모두 서로 자유주의자임을 자처한다. 공산주의자들도 자유를 달라고 외친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유주의를 한 쪽에선 부르주아지들의 집단이기주의로 해석하기도 하고, 한 쪽에서는 반공주의와 동일시하기도 한다. 자유주의에 대한 해석이 구구한 것은 자유주의 자체가 시대와 사회와 집단에 따라서 각기 달리 사용되어 왔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혼란을 피하고 자유주의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자유주의가 등장하고 발전해온 역사적 과정을 살펴보자. 다른 사회이념과 마찬가지로 자유주의도 사람의 머리 속에서 관념적으로 발전되어 온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역사 속에서 형성되어 왔기 때문이다.

12-3세기경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자본주의경제의 발전은 르네상스, 종교개혁과 시민혁명이라는 근대사회발전의 물질적 토대를 제공하였으며 또한 이런 변화를 추진한 주역인 부르주아(중소상공인)들을 탄생시킴으로써 자유주의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자유주의는 르네상스, 종교개혁 및 시민혁명이라는 서양 근대 역사의 전개 속에서 형성되어 왔다. 14-5세기 이탈리아에서 꽃피운 르네상스는 인본주의, 개인주의, 현세주의, 이성에 대한 자각, 이성을 이용한 과학의 발견, 합리적 사고방식이라는 자유주의의 요소들을 낳았다. 16-7세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도 종교, 사상 및 양심의 자유, 그리고 관용이라는 자유주의 요소

---

3) freedom과 liberty는 혼용된다.

가 형성되었다. 17-8세기에 절대군주제를 무너뜨린 시민혁명<sup>4)</sup>에서는 폭정에 대한 저항권, 사유재산권을 포함한 개인의 기본인권사상,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자유주의 사회제도가 생성·발전하였다. 이처럼 자유주의는 인본주의, 현세주의, 개인주의, 과학적·합리적 사고방식, 종교와 사상의 자유, 관용, 폭정에 대한 저항권, 사유재산 및 인권의 존중 등을 모두 포함하는 사상이며 이는 근대서양의 합리적 사고방식 전체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유주의를 이렇게 파악하면 범위가 너무 넓어서 자유주의를 다른 서양 근대 사상과 구분하기 힘들게 한다. 현세주의나 과학적 사고방식 등은 자유주의의 요소이긴 하지만 마르크스주의도 이런 사고방식을 주장한다. 따라서 다른 사상과 구분되는 협의의 자유주의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자.

마르크스(Karl Marx)와 같은 사회주의자, 헤겔(G.W.F. Hegel) 과 같은 국가주의자, 그리고 민족주의자를 제외하면, 베이컨(Francis Bacon), 홉스(Thomas Hobbes), 로크(John Locke), 흄(David Hume), 벤담(Jeremy Bentham), 스미스(Adam Smith), 밀(John Stuart Mill), 몽테스큐(C. L. Montesquieu), 볼테르(François M. A. Voltaire), 칸트(Immanuel Kant), 베버(Max Weber) 등 근대 서양의 대표적 사상가들 대부분을 자유주의자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자유주의자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이 매우 많기 때문에 이들의 다양한 주장이나 이론을 모두 담을 수 있는 자유주의를 정의하기란 힘들다. 이런 곤란을 피하기 위해 역사적 맥락에서 파악해 보자.

근대 서양사회는 자본주의경제와 함께 발전하여 왔다. 자본주의의 발전은 서양사회를 모든 면에서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생활단위가 장원이라는 공동체에서 상공업생업으로 살아가는 개인으로 변함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활양식과 사고방식이 중세의 공동체주의에서 개인주의라는 근대적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다. 또한 중세의 지주귀족계급이 점차 힘을 잃어간 반면, 평민인 **부르주아**<sup>5)</sup>라는 새로운 계층이 부를 축적하여 새로운 사회제도세력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 부르주아지계급이 서양 근대사회발전의 주역인 **시민계급**<sup>6)</sup>이다.

서양에서 대략 15세기에서 18세기까지는 **근대국가건설**(nation building)의 시기였다. 서로마제국이 476년에 멸망한 이후 천년의 중세 서양에는 수많은 군소영주들이 독자적으로 자신의 지역을 다스렸기 때문에 통일된 근대국가가 없었다. 유럽에서 절대군주들이 나타나서 분할되어 있던 지역들을 통일하고 근대국가를 건설하기 시작한 것은 대략 15세기 경부터라고 볼 수 있다. 절대군주들은 안으로는 지방영주들을 정복하여 분할되어 있던 국토를 통일하고, 조세제도, 행정제도, 법률 등을 정비하여 근대국가를 건설하고 밖으로는 외국과 영토전쟁을 계속하였다. 이 시기 유럽국가들의 부국강병책 내지 경제적 민족주의의 경제정책을 **중상주의**(mercantilism)라고 부른다.

부르주아들은 절대군주제가 처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절대군주에 협력하였다. 절대군주들이 지방영주들의 수탈과 규제를 막아주고 영토와 시장을 통일하고 제도를 정비하여 주는 것이 이들에게 유리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절대군주들은 기존 지방영주들의 세력을 약화

---

4) 서양 근대사에서 성공한 시민혁명은, 화란의 스페인으로부터의 독립전쟁(1566~1609), 영국의 청교도혁명(1642~9)과 명예혁명(1688), 미국의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전쟁(1775~83), 및 프랑스 대혁명(1789~99)의 넷이다.

5) 부르주아(bourgeois)는 중소상공인을, 부르주아지(bourgeoisie)는 중소상공인계급을 말한다.

6) 시민(citizen)을 이념형으로 파악하면, 사회의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회구성원이며,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압제에 대항하여 투쟁하며 자신이 바라는 사회의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사회적 의무를 수행하는 계층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시키기 위해서 부르주아들의 협력이 필요하였다. 절대군주들은 이를 위해 부르주아 출신들을 관료로 등용하였으며, 귀족이나 교회로부터 뺏은 토지를 부르주아들에게 판매하였다. 이와 같이, 절대군주제의 형성은 절대군주와 부르주아의 연합세력이 기존의 지방 영주들을 축출하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절대군주들이 통일된 근대국가를 건설한 다음에는 부르주아들이 절대군주가 지배하는 구체제에 대하여 반기를 들게 되었다. 군주의 권한은 절대 권력으로 비대하여졌으며 군주를 정점으로 귀족과 평민을 차별하는 신분질서가 공고하여졌다. 이러한 차별적인 신분질서에 기초한 절대군주제가 바로 자유주의자들이 저항한 **구체제**(ancient regime)였다. 구체제는 귀족들에게는 세금을 면제하는 등 각종의 특혜를 허용한 반면, 상공인과 농민들인 평민들은 조세와 병역의 부담, 관헌들의 수탈로 인하여 고통을 겪게 되었다. 평민에 속하였던 부르주아들은 구체제에 대항한 시민혁명 투쟁을 선도하는 주동 계급이 되었다. 시민혁명을 추진하여 근대사회를 건설한 시민계급의 사회사상이 자유주의이다. 즉 **자유주의**란 16세기 후반부터 18세기말까지의 서양 시민혁명 과정에서 성장한 사회사상이며, 근대서양에서 민주국가를 건설한 근대시민정신이며, 원래 정치적 투쟁과정에서 성장한 정치적 이념이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파악하면 자유주의의 핵심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부르주아들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고 주장함으로써 자신들을 수탈하는 신분 차별을 반대하였고, 절대군주의 횡포를 막기 위하여 헌법과 법으로 국가권력을 명확히 제한하는 입헌주의 내지 법치주의를 주장하였으며, 나아가서는 자신들이 직접 국정에 참여하기 위하여 민주주의를 주장하였으며, 자신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하여 정부의 경제규제를 철폐한 자유시장경제를 주장하였다. 과거 중세시대의 공동체생활과 달리 이들의 생업은 개인적으로 자기책임 하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상공업이었기 때문에 공동체가 아니라 개인의 권리와 책임을 중시하는 개인주의를 주장하였으며, 개인의 생명과 재산, 자유 등 자신들의 모든 정당한 사회적 권리를 자유라는 한 마디로 요약하였다. 자유주의가 주장하는 자유는 자유만이 아니라, 생명과 재산의 권리를 모두 포함하는 개인의 기본인권 전체이다<sup>7)</sup>.

이상과 같은 시민혁명과정에서 형성된 근대시민정신을 **고전적 자유주의**라고 부를 수 있다. 고전적 자유주의는 16-9세기에 걸쳐서 구미에서 민주주의, 법치주의, 자유시장경제와 같은 근대적 사회질서를 건설하는 데에 기초 이념을 제공하였다.

### 3. 자유주의의 인간관 : 인간의 불완전성

인간의 본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사회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모든 사회 현상은 구체적인 인간의 개인적·집단적인 행동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인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는 이론은 사상누각과 같아 잘못된 해답을 제시하기 쉽다<sup>8)</sup>. 자유주의는 이 점에서 튼튼한 기초를 갖고 있다.

모든 인간은 불완전하다는 것이 자유주의 인간관이자 자유주의의 모든 주장의 기초이다. 우리 인간은 동물과 달리 이성과 양심을 갖고 있는 위대한 존재라고 스스로 자랑하지만, 밀

7) 로크는 생명(life)과 자유(liberty)와 재산(estates)을 합하여 소유물(property)라고 이름하고 이의 보호가 사회(국가)의 목적인다고 보았다. Locke, 이극찬 역, §85, §123.

8) 예를 들어 마르크스는 철학, 경제학, 정치학, 법학, 사회학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수미 일관된 장대한 이론체계를 구축하였으나, 인간성을 과신하였기 때문에 사유재산제도가 철폐된 사회주의사회가 실현되면 인간의 이기심도 계급투쟁도 사라진 지상천국이 실현될 것으로 잘못 예상하였다.

과 하이에크(Friedrich A. Hayek)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인간은 불완전하기 짝이 없는 존재이다(Mill, 『자유론』, 258쪽; Hayek, LLL1, 11-14쪽). 인간의 불완전함은 인식과 도덕의 양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 인식에서의 불완전함이란 생각에서 오류를 범할 수 있음을 말한다. 하이에크의 말과 같이, 인간은 사고능력이 불완전하고 정보도 부족하여 사실을 잘못 인식하거나 틀리게 예측하는 것이 예사이다. 뿐만이 아니라 인간은 품성에서도 불완전하여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기 쉽다. 인식 능력의 불완전함보다도 이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된다. 스미스가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는 양심이라는 내부의 불편부당한 판사를 갖고 있으나 이 판사는 이기적 욕망이라는 폭력과 불의에 의해 부패할 위험에 자주 처하므로, 우리는 종종 사실과 크게 다른 보고서를 제출하는 유혹에 빠져든다.’(Smith, 『도덕감정론』, 141 쪽 각주). 모든 인간이 인식과 윤리의 양면에서 불완전한 것을 **인간의 이중적 불완전성**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인간의 이중적 불완전성이 자유주의의 모든 중요한 주장들의 기본 근거이다. 사상과 비판의 자유가 필요한 것은, 누구나 과오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이며, 정치권력자들도 불완전한 인간이므로 정부권력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며, 경제계획을 수립하는 정부의 관료들도 정보와 인식능력이 부족한 인간이므로 이들이 작성한 경제계획이 불완전할 수밖에 없으며, 누구든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에게 부당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해 공정한 법질서가 필요하다.

## 4. 자유주의의 기본 원리

고전적 자유주의의 기본 원리들을 정리해 보자. 자유주의는 그 후 시대와 사회에 따라서 다소 변형되었지만 이 원리들은 변하지 않고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 생각된다.<sup>9)</sup>

### 1) 사회적 평등(만인평등)

모든 사람은 본래 사회적으로 평등하다는 만인평등 사상이 자유주의의 출발점이다. 모든 사람이 자유롭다는 주장도 여기서 도출된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므로 아무도 타인의 자유를 억압할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원래 자유와 평등은 갈등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sup>10)</sup> 만인평등은 자유주의의 첫째 기본원리이며 출발점이다. 자유주의의 사회적 평등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첫째로, 만인평등은 **인격과 인권에서의 평등**을 말한다. 자유주의는 기본적인 인권과 인격에서 모든 사람이 절대적으로 평등하다고 본다. 모든 개인은 신분, 인종, 성, 종교 등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게 그 자체로 절대적인 존엄성을 가진 평등한 존재이다. 따라서 어떤 개인도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그 목적이 아무리 숭고하더라도,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자유주의 이전에는, 국가나 민족, 가문, 종교나 이념을 위해서, 개인이 희생되는 것을 당연시하였으나, 자유주의는 이를 반대한다.

9) 자유주의의 기본원리를 최초로 명확히 정리한 사람은 영국의 로크(John Locke; 1632~1704))라고 볼 수 있다. 자연적 자유, 만인 평등, 개인의 기본권(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합의에 의한 정부 형성(사회계약론), 정부권한의 제한과 권력분리, 종교적 관용, 법치주의, 정부에 대한 사회의 우위, 혁명권 인정, 정당방위의 원칙 등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대부분 원칙이 그의 『통치론』(*The Second Treatise of Government*, 1690)에 나와 있다.

10) 평등은 본원적 평등, 사회적 평등 및 경제적 분배의 평등의 셋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 중 자유와 갈등을 갖는 것은 경제적 분배의 평등뿐이다. 이근식(2011)

둘째로 자유주의는 **법 앞의 평등**을 주장한다. 신분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근대 법치주의도 만인평등의 한 표현이다. 왕은 법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면, 귀족은 평민보다 법적으로 우대받는 것과 같은, 전근대적 제도를 청산한 것이 자유주의이다. 법의 공정한 집행만이 아니라 이에 더하여 법의 내용도 공정해야만 법치주의이다. 불공정한 내용의 법의 공정한 집행은 불공정한 사회를 만든다.

세 번째로 자유주의의 평등은 **기회균등**을 의미한다. 교육, 직업, 공직출마 등 모든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개방되어야 한다. 구체제의 신분 사회에서 평민이기때문에 귀족들의 차별을 받았던 부르주아들은, 자신들을 속박하던 신분의 굴레를 벗기 위하여 만인평등의 자유주의를 앞세워 왕과 귀족에 대항하여 싸워 승리하였고, 그 결과 만인평등의 사상이 현실에서 실천되었다. 인류가 국가를 이루어 살아 온 수 천 년 세월 동안 만인평등을 주장한 종교나 사상은 있었지만 그것은 일부 사람의 생각에만 그쳤을 뿐 현실에서는 신분, 인종, 성, 종교 등의 여러 이유를 내세운 인간차별을 당연시하여 왔으며, 그 결과 절대다수의 사람들은 인간대접을 받지 못하고 고통당하였다.<sup>11)</sup> 이런 오랜 편견과 악습을 타파하고 만인평등의 사회를 최초로 실현한 것이 자유주의이다. 백 여 년 전의 조선이나 팔십 년 전의 일제시대에 우리나라에서 천민이나 여자라는 이유로 얼마나 심한 차별을 받았던가를 생각하면 만인평등의 자유주의사상이 얼마나 힘찬 생명력을 갖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서양과 동양이 다른 것이 아니고, 근대와 전근대가 다른 것이며, 근대를 전근대로부터 구분 짓는 핵심은 만인평등이라는 자유주의정신이라고 볼 수 있다. 서양문화는 기본적으로 만인평등과 개인주의의 문화인 데에 반하여, 동양은 차별과 공동체의 문화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서양에서도 자유주의가 보급되기 전에는 동양과 똑같이 개인주의도, 평등사상도 없었다. 자유주의의 만인평등사상은 인류역사상 아마도 가장 중요한 생각이자 근대성의 핵심이라고 생각된다.

만인평등은 **개인인권의 절대적 보장**을 의미한다. 지금은 어떤 사람의 인권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다는 생각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 근대를 전근대와 구분하는 것은 인권사상의 유무이다. **인권사상은 자유주의의 핵심**이다.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평등은 중대한 한계를 갖고 있다. 위에서 말한 평등 중에서 세 번째의 기회균등은 애매한 측면이 있다. 직업선택과 같은 대부분의 사회생활에서 선택기회는 실질적으로 부모의 재산과 같은 개인 환경으로부터 결정적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경제적 분배의 평등문제와 직결된다. 자유주의는 전반적으로 이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히 부르주아들의 사상이었던 고전적 자유주의는 빈곤을 개인의 책임으로 보고 당연시하였다. 분배의 불평등은 자유주의의 가장 큰 취약점이다.

## 2) 사상과 비판의 자유

생각에서 행동이 나오므로 생각의 자유는 자유의 출발점이다. 자유 중에서 가장 먼저 투쟁 대상이 된 것은 종교개혁에서 나타난 신앙과 양심의 자유이다. 신앙과 양심은 어떤 권력

---

11)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도, 노예는 주인보다, 여자는 남자보다 열등하므로 노예는 주인의 지시를 받고 여자는 남자의 지도를 받아야 함이 당연하다고 보았다. 이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 여러 곳에 나타나 있다. 플라톤은 심지어 여인과 아이들도 소유물로 보고 이들의 공유를 주장하였다(Plato, 박종현 역, p. 507).

도 강제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신교도들은 기존 가톨릭 세력과 투쟁하여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쟁취하였고 이는 사상의 자유로 확대되었다. 생각은 발표될 때에 사회적 의의를 가지므로, 생각의 자유는 언론과 출판의 자유로 확대되지 않을 수 없다. 자유주의자들은 언론과 출판의 자유에 포함되는 토론(비판)의 자유를 중시하였다. 비판의 자유가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인간의 불완전함을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앞 3절에서 본 바와 같이 사람들은 인식과 윤리에서 불완전하므로,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인간의 잘못을 바로 잡는 것이 자유로운 비판이다. 권력자의 횡포를 제어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론, 주장 등)을 바로 잡는 것도 모두 비판의 자유로부터 비롯된다. 밀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인간이 저지르는 실수가 예방되거나 시정될 수 있는 것은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 덕분이다.

“인간은 토론과 경험에 힘입어 자신의 과오를 고칠 수 있다. 경험만으로는 부족하다. 과거의 경험을 올바르게 해석하자면 토론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잘못된 생각과 관행은 사실과 논쟁 앞에서 점차 그 힘을 잃게 된다.” (Mill, 『자유론』, p.261)

권력에 대한 비판은 사회발전에 필수적이다. 권력자들도 이기적인 불완전한 인간이므로 공개 비판이 없으면 권력의 부패는 필연적이다.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그러므로 사회의 번영과 발전을 결정하는 것은 정치체제가 민주주의이냐의 여부이기 보다, 권력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의 유무이다. 조선은 절대군주국가였지만 상소라는 비판제도가 실제로 제 기능을 발휘하던 조선초기에는 경제와 문화가 모두 융성하였으나, 공개적 비판이 암살되었던 조선 중기이후에는 권력의 부패로 사회가 도탄에 빠져서 결국은 망국의 길을 걷게 되었다.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국가들이 패망한 것도 비판의 자유(언론의 자유)가 없어서 권력이 부패한 탓이었다고 생각된다. 비판의 자유가 없으면, 정치체제에 상관없이, 권력이 부패하여 사회가 쇠망한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진리일 것이다. 비판의 자유가 없는 지금의 러시아, 중국, 북한도 같은 길을 걸을 것 같다.

비판은 **발전의 원동력**이기도 하다. 개인, 집단, 사회, 학문 등 모든 것의 발전은 기존현실에 대한 비판, 즉 문제점의 발견과 지적으로부터 시작된다. 근대서양에서 과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심포지움이나 학술잡지와 같은 공개 토론의 장이 제도적으로 정착되었던 덕분이라 생각된다. 포퍼(Karl Popper)의 **비판적 합리주의**(critical rationalism)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인식의 불완전성 때문에 인간은 본질적인 오류가능성을 갖고 있으며, 진리 그 자체는 영원히 알 수 없는 것이지만, 끊임없는 비판을 통해서 오류가능성을 조금씩 극복하여 진리에 점진적으로 접근하여 갈 수 있을 것이다.(Popper, 이한구·이명현 역, 제2권, 304쪽) 현실에 대한 비판은 모든 발전의 출발점이다.

생각의 자유가 행동의 자유로 나타난 것이 **집회·결사의 자유**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핵심요소일 것이다.

### 3) 개인주의

개인주의는 자유주의의 기본입장이다. **개인주의**(individualism)는 구체적 인간인 개인만이 궁극적인 가치를 갖고 있고, 국가, 집단, 계급, 이념 등 그 이외 모든 것들은 자체로서 가치는 없고 오직 개인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수단으로서만 가치를 갖는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자유주의는, 집단을 위해 개인은 희생될 수 있다고 보는 전체주의 혹은 집단주의를 반대한다. 한 사람의 목숨보다는 여러 사람의 목숨이 더 중요하지만, 집단이 중요한 것은 집단 자체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집단에 속한 개개인이 소중하기 때문이다.

자유주의가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인간 역사에서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이다. 그 이전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이타심이 장려되었고, 자기중심적인 태도는 대개 비윤리적인 것으로 비난받아 왔다. 이는 오랜 세월동안 인류는 항상 공동체를 이루어 공동으로 생산하고 소비하면서 살아 왔기 때문이다. 공동체생활에서 공동체의 안위를 위협하는 개인주의는 비난받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전통적 윤리관은 자본주의사회와 부합되지 못한다. 자본주의경제에서 상공업자들은 자기 혼자 책임과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공동체보다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개인주의는 자본주의경제에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책임 하에서 개인기업을 운영하며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중소기업인들의 생활관을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윤리의 변환은, 경제가 변하면 비경제 부문들도 따라 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다.

개인주의는 **이기주의(egoism)**와 다르다. 이기주의는 타인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것에 개의치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무분별한 탐욕인 반면에, 개인주의는 자기의 권리와 똑같이 타인의 권리도 존중하여 타인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로크는 다른 사람의 생명, 자유, 재산을 손상시키면 안된다는 것은 자연법<sup>12)</sup>임을 주장하였고, 스미스는 자기중심적 생활이 당연함을 인정하면서도 인간의 탐욕은 반드시 공정한 법에 의하여 제한되어야 함을 역설하였고(Smith, 『도덕감정론』, 340쪽), 밀은 타인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자유를 허용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Mill, 『자유론』, 247쪽).

고전적 자유주의를 자유방임주의라고도 부르는데, 이 말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여 자유주의가 아무런 규칙도 없이 무제한 자유를 허용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이다. 공정한 규칙(법)은 자유주의의 필수조건이다. 공정한 규칙이 없는 약육강식의 무법천지에서는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다.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자유는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공정한 규칙 내에서의 자유이다. 스미스의 말처럼 우리의 양심은 종종 우리의 탐욕 앞에서 무력하므로,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강제하는 공정한 규칙(법)이 사회유지에 필수적이다(Smith, 『도덕감정론』, 340쪽). 로크가 말한 바와 같이, “법이 없으면 자유도 없다”(Locke, 이극찬 역, 71쪽).

공정한 법질서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오위켄(Walter Eucken)으로 대표되는, 2차대전 직후 서독의 질서자유주의<sup>13)</sup>만이 아니라, 모든 자유주의가 질서자유주의이다. 공정한 법(규칙)과 이를 준수하는 준법정신은 자유주의의 필수조건이다. 법의 공정한 내용과 공정한 집행을 의미하는 법치주의는, 자유주의의 핵심요소의 하나이다.

#### 4) 독립심과 자기책임

12) 로크에 의하면, 자연법(natural law)이란, 하나님이 만드신 것으로, 사람들이 사회(국가)를 형성하여 살기 이전의 상태인 자연상태에도 존재하던 법이며, 인간의 이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법이며, 그 핵심은 개인의 기본권의 보전이다. 자연상태에서는 이의 집행이 개인에게 일임되어 준수되지 않기 때문에, 이의 집행을 강제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들기 위하여 사람들이 합의하여 국가가 형성되었다는 것이 그의 『통치론』의 요지이다. Locke, 이극찬 역, §6.

13) 서독의 질서자유주의에 대해서는 이근식, 『서독의 질서자유주의 : 오위켄과 뢰프케』 참조.

자유주의는 국가나 타인의 지원도 바라지 않고, 각자 자기 권리와 책임 하에 독립하여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 본다. 자기와 자기가족의 생계는, 국가, 교회, 이웃, 친척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해결함이 자유주의의 원칙이다. 개인독립성의 원칙에서 보면,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신이 감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자신의 노력의 성과는 자신이 향유한다는 이 원칙이 **사유재산제도** 정당성의 근거이다. 사유재산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재산으로부터 얻은 것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는 자신이 홀로 책임져야 한다. **자기책임의 원리**가 자유주의 원칙이다. 이런 독립과 자립의 태도는 자본주의사회에서 각자 자기 노력과 자기 책임으로 독립적으로 사업하여 살아가는 부르주아의 생활방식을 반영한다.

경제적 자립심은 근대 자본주의 경제발전의 동력이 되었다. 개인들로 하여금, 타인이나 국가의 지원을 바라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정치적 독립정신은 민주주의발전에 초석이 되었다. 정치적으로 그 누구의 지배도 받지 않고 스스로 다스리겠다는 정치적 독립심이 민주주의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사회생활에서 개인의 독립심과 자립심은, 체제에 상관없이 모든 사회의 건강함과 발전을 위한 필수조건일 것이다. 독립심과 자립심이 없으면 스스로 노력하고 자기 책임을 다하기 보다는 다른 사람이나 국가의 지원을 바라는 의타심이 생기게 되고, 그 결과 나태와 불만과 분쟁을 낳기 쉽다.

현재 우리사회에 크게 결여된 것 중의 하나가 자립심이다. 많은 단체들이 정부지원을 당연한 듯이 요구하고 있지만, 세금은 다른 국민들이 낸 것이므로 이는 다른 국민들의 돈을 자기에게 달라고 하는 것과 같다. 이런 의타심을 버려야 우리사회가 한 단계 발전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독립과 자립의 원칙은 이웃에 대한 배려를 소홀히 하게하여 인간소외를 낳는다는 폐단이 있다.

## 5) 관용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이 나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용인하는 관용이 있어야 자유로운 비판이 가능하다. 종교나 가치관이나 이해관계가 다르고 생각이 사람마다 다른 것을 인정하는 관용은 평화로운 사회를 위한 필수조건이다. 화이부동(和而不同)이란 공자의 말씀도 관용과 동일한 뜻일 것이다<sup>14)</sup>.

사람들의 생각과 재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는 것이 모두에게 유익하다. 하이에크가 말한 바와 같이, 위대한 사회에서는 개인들의 목표가 서로 상이함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상이하기 때문에 구성원들은 서로 이익을 얻으면서 함께 살아 갈 수 있다(Hayek, vol. 2, 110쪽). 롤즈(John Rawls)도 다양한 가치관을 인정하는 관용을 그의 정치적 자유주의의 핵심으로 삼았다<sup>15)</sup>. 그에 의하면 관용의 정신은 종교개혁 이후 16-7세기에

14) 君子 和而不同, 小人 同而不和. 『논어』, 자로 편.

15) 롤즈는 정치적 자유주의(political liberalism)와 포괄적 자유주의(comprehensive liberalism)를 구분하였다. 포괄적 교리(doctrin)란, 공리주의나 평등주의와 같이, 인생과 사회에 관한 윤리관을 말한다. 포괄적 자유주의도 이 중의 하나로서 개인의 자율성(autonomy)과 개인성(individuality)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보는 관점이며, 칸트와 밀이 이에 속한다.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는, 서로 꾀박하지 않는 한, 이런 다양한 교리들을 모두 인정하여 병존토록 하자는 주장이다. 롤즈는 정치적 자

유럽에서 발생하였던 종교전쟁의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 체득된 종교적 관용에서 시작되었다. 관용의 다른 표현이 **다원주의(pluralism)**이다. 관용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관용의 정신을 인정하여 타인의 가치관과의 병존을 인정하는 다원주의를 인정할 때에만 관용의 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sup>16)</sup>. 왈쩌(Michael Walzer)의 말대로, 자유주의사회는 민주주의와 함께 관용의 정신을 인정하는 집단으로만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Walzer, 16쪽).

원래, 자유는 원하지 않는 속박으로부터의 자유(liberty from)이었다. 반면에 자유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자신이 바라는 바를 이룰 수 있는 자유(liberty for)를 주장하기도 한다. 벌린(Isaiah Berlin)은 전자를 **소극적 자유(negative liberty)**로, 후자를 **적극적 자유(positive liberty)**라고 불렀다. 소극적 자유만이 관용과 양립할 수 있다. 반면에 적극적 자유는 관용과 양립하기 힘들다. 벌린의 말대로, 사회주의, 민족주의나 전체주의와 같은 사상은 모두, 경제적 평등, 민족정신, 사회전체의 복지와 같은 적극적 자유를 주장하며, 가치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관용이 없는, 억압적인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Berlin). 이런 점에서 자유주의가 주장하는 자유는 적극적이 아니라 소극적인 자유이다. 원래의 자유주의는, 소극적 자유의 쟁취를 목표로하였다.

열린 마음이 있을 때에만 건설적 비판과 관용이 가능하다. **열린 마음(open mind)**이란, 밀의 말처럼, 자신의 생각도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말, 특히 자신의 생각과 다른 타인의 말을 경청하는 자세를 말한다.

“어떤 사람의 판단이 참으로 신뢰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 그것은 대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일까? 그것은 항상 그가 허심탄회하게, 즉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놓고 그의 의견이나 행위에 대한 비판을 자유롭게 받아 들였기 때문이다.”(Mill, 『자유론』, 261쪽)

요즘 인터넷 댓글에서 다른 사람을 욕지거리로 비방하는 것을 흔히 보는데 이는 증오만 날고 자신의 인성도 황폐하게 만들 뿐이다.

## 6) 정치권력의 감시

밀의 말과 같이 인류역사 수 천년 동안 개인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주범은 주로 정치권력자들이었으므로 정치권력을 감시하고 제한하는 것이 자유의 본질이다.(Mill, 『자유론』, 237-8쪽) 이 때문에 자유주의는 선거로 정치권력자를 선출하고 바꿀 수 있으며 법으로 정부의 권력을 엄격히 제한하는 민주주의를 채택하였다. 히틀러 정권, 스탈린 정권, 북한 정권, 과거 우리나라 군사정권과 같은 독재정권들은 모두 인권과 자유를 유린하였다. 민주주의와 자유로운 언론과 집회·결사를 통한 정치권력의 감시와 견제는 자유주의의 핵심 내용의

---

유주의가 민주주의사회의 기본 원리의 하나이며, 민주주의사회에서, 정치적 자유주의는 모든 구성원에게 요구되어야 하지만, 포괄적 자유주의는 개인의 문제이므로 요구될 수가 없다고 보았다. Rawls, 장동진 역, xxx - xxxi쪽.

16) 19세기 중반, 칼 마르크스가 영국 런던에 망명해 살면서 독일의 노동자들에게 편지와 책으로 사회주의사상을 선동하고 있었을 때의 일이다. 독일경찰은 마르크스의 선동 행동을 막기 위하여 영국경찰에게 마르크스를 체포하여 넘겨달라고 공식으로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영국경찰은 마르크스가 범법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체포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 당시 영국법으로는 출판이나 강연은 범법행위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150년 전의 영국보다 현재의 우리나라에서 관용과 사상의 자유가 부족한 것 같다.

하나이다.

## 5. 자유주의의 진보성과 반동성

자유주의의 진보성과 수구성(반동성)은 늘 논란거리이다. 한 편에선 자유주의를 진보적 이념으로 파악하여 지지하는 반면에 다른 한 편에서 자유주의를 부르주아지의 반동적 이념이라고 거세게 비판한다. 이는 자유주의 자체가 진보성과 반동성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자유주의의 양면성(이중성)**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자유주의의 역사적 반동성은 주로 자유주의의 계급적 한계에서 비롯되었다. 자유주의의 주도세력인 부르주아지는 유산자계급이다. 이러한 계급적 인식의 한계가 자유주의자들 역사에서 분명하게 나타났다. 로크는 사람의 생명은 뺏을 수 있으나 재산은 뺏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18세기 프랑스의 자유주의자 볼테르는 빈민을 위한 교육을 노동자의 버릇을 망친다고 반대하였으며, 18세기 프랑스의 계몽주의자이자 백과전서파였던 디드로(Denis Diderot, 1713-84)와 헬베티우스(Claude-Adrien Helvétius, 1715-71)는 유산자만 시민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독일의 칸트도 불평등은 효율성을 위한 필요악이라고 보았다(Arblaster, 190쪽).

이러한 계급적 한계는 시민혁명과정에서도, 혁명에 성공한 다음의 부르주아 정부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났다. 시민혁명 후 영국과 프랑스에서 모두 처음 공화정이 세워졌으나 다시 왕정이 부활한 것은<sup>17)</sup> 부르주아들이 빈민층의 사회혁명을 두려워하여 왕정의 복귀를 원하였기 때문이다. 화란, 영국, 프랑스, 그리고 미국에서 시민혁명이 성공한 다음 등장한 민주 정부들은 가격규제나 매매규제와 같은 중상주의의 경제규제들은 모두 철폐하면서, 재산이 있어야만 책임의식이 있는 시민이 될 수 있다는 명분으로 선거권을 유산자에게만 부여하였다. 이 정부들은 사유재산제도의 보장을 법치주의의 첫째 핵심으로 보고 이를 위해 민법을 개정하고 사유재산제도를 확립하였다. 부르주아 정부들은 절도 등 재산범죄를 가혹한 형벌로 다스렸다. 18세기 영국에서는 주인집에 방화한 11살의 소년, 1실링을 훔친 남자. 손수건을 훔친 소녀가 교수형에 처해진 일도 있었고 수많은 죄인들이 해외 유형에 처해졌다. 18세기 영국정부는, 가혹한 형벌을 통한 공포를 계급갈등에 대처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였던 것 같다(Arblaster, 170쪽). 부르주아정부들은 노동조합을 금지하고 저임금정책을 지속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최소한으로 유지하였으며, 빈민들을 위한 공공교육은 거의 시행하지 않았다. 이들은, 빈곤은 태만과 무절제의 탓이며, 가난하여야만 열심히 일하므로 근면을 위해서는 빈곤이 필요하다고 보았다(Laski, 259쪽). 시민혁명 후 19세기 영국의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이 만든 ‘신구빈법’(the New Poverty Law of 1834)은 실업자들을 집단작업장에 강제로 수용하고, 일하는 사람보다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수용자들을 극히 열악하게 처우하였다. 이 때문에 당시 노동자들은 강제작업장을 ‘노동자의 바스티유감옥’라고 불렀다. 영국 정부는 또한 1840년대 후반 아일랜드의 감자 대기근을 거의 방치하여 8백만 인구중 백만이 아사하고 백만이 이민으로 떠나게 되었다.

이러한 계급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와 시민혁명은 역사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

17) 영국에서는 1649년 찰스1세의 처형 이후 공화국이 되었다가, 크롬웰 사망 후 1660년 찰스2세가 즉위하여 왕정이 복구되었다가 명예혁명으로 쫓겨났으며 그 후 왕은 군림하지만 지배하지 않는다는 입헌군주제가 확립되었다. 프랑스에서는 대혁명 이후, 나폴레옹의 제정에 이어 부르봉가의 루이 18세와 샤를르10세가 즉위하였다.

우선 시민혁명이 절대군주제를 무너뜨리고 부르주아지의 민주정부를 세웠다는 것은 비록 그것이 가난한 민중을 위한 것은 아니었지만 역사발전이었음을 부인하기 힘들다. 또한 가난한 민중이 시민혁명 덕분에 과거보다 조금 더 큰 자유와 평등을 누리게 된 것도 사실이다. 언론과 출판의 자유가 확대되었고, 신분에 의한 사회적 차별이 대폭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자유주의는 자유와 평등, 인권의 존엄성 등과 같은 근대적 가치의 개념을 널리 보급시켰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근대적 사회제도를 정착시킴으로써, 자유주의는 역사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상이라고 생각된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므로 인간이 인간을 지배해서는 안된다는 자유주의의 만인평등의 사상이 이 세상을 얼마나 변화시켰는가를 생각해 보아도 자유주의의 진보성을 알 수 있다. 자유주의의 만인평등은 아무도 거부할 수 없는 상식이 되었고 그 덕에 근로자, 빈민, 천민, 여성, 소수민족,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이 점차 철폐되어 사회진보가 이루어져 왔다.

## 6. 시장과 정부의 성공과 실패, 자본주의와 국가의 성공과 실패

앞으로의 논의를 위해 시장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정부의 성공과 실패라는 개념과 이를 확대한 자본주의와 국가의 성공과 실패라는 개념을 정리해 보자. 우리가 사는 현실의 자본주의경제는 시장과 정부라는 두 부문에 의해 운영된다. 모든 자본주의국가에 존재하는 정부는 사회주의 경제부분이다. 정부는 공동생산과 공동소비라는 사회주의적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중국, 러시아,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국가에도 시장과 사유재산이 부분적으로 인정된다, 현실에는 백 퍼센트의 자본주의경제도, 백퍼센트의 사회주의경제도 없고 모든 경제가 두 가지가 섞여 있는 **혼합경제**이다. 자본주의 경제의 비중이 높으면 자본주의경제, 사회주의 경제의 비중이 높으면 사회주의경제라 부를 뿐이다.

시장의 성공부터 생각해 보자. 자본주의경제의 첫째 장점은 생산과 소비에서의 효율성이 높다는 것이다. 과거 중세봉건경제나 현대의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비교해 볼 때 자본주의경제는 한정된 자원을 이용하여 인간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훨씬 더 많이 생산한다. 이는 주로 시장가격기구, 이윤동기와 경쟁이라는 세 요소 덕분이다. 시장에서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상품의 가격은 오르고 반대로 공급이 수요보다 더 많은 상품의 가격은 하락한다. 가격 상승을 보고 생산자는 생산을 늘리고, 수요자들은 소비를 줄인다. 반대로 가격 하락은 생산자에게는 생산을 줄이라는 신호를, 소비자들에게는 소비를 늘리라는 신호를 보낸다. 이런 가격의 신호 덕분에 생산과 소비는 자동적으로 조절되어 한정된 자원으로 소비자들 필요가 비교적 잘 충족된다. 이상과 같은 상품의 수급의 변동에 따라서 가격이 등락하고 이에 의해 상품의 수급이 적절하게 조절되는 것을 **시장가격기구의 신호등기능**이라고 한다. 또한 자본주의경제에는 기업가들이 누가 강제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궁리하고 저축하고 투자하는 강력한 **이윤동기**가 발휘된다. 또한 자본주의경제에는 기업들간에 치열한 품질경쟁과 가격경쟁이 존재하고 기업들은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그 덕분에 상품들이 최고의 품질과 최저의 가격으로 공급된다. 반면에 사회주의경제는 시장가격기구도 이윤동기도 경쟁도 없이 정부의 계획, 지시와 감독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생산의 효율성이 매우 낮지 않을 수 없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시장가격기구의 신호등기능, 이윤동기 및 경쟁이라는 세 요소 덕분에 주어진 한정된 자원으로 사람들이 필요로하는 물자들이

가능한 싸게 많이 공급되는 것을 **시장의 성공**(market success)이라고 부를 수 있다. 단 경쟁의 장점은 독과점기업이 없는 경쟁시장에서만 존재하고 경쟁이 없거나 적은 독과점시장에서는 없거나 적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시장에는 장점만이 아니라 단점 내지 결함도 있다. 불황, 실업, 빈부격차와 빈곤, 독과점화 그리고 외부효과와 공공재의 부족이 그것이다. 이런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결함을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s)라고 부른다. **외부효과**(externalities)에는 외부경제와 외부불경제가 있다. **외부경제**(external economies)란 정부의 도로건설 덕분에 주변 땅 값이 올라서 그 지주들이 무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처럼 합당한 대가의 지불이 수반되지 않고 발생하는 경제적 이득을 말한다. **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ies)란 이와 반대로 합당한 경제적 지불을 수반하지 않고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를 말한다. 공해가 대표적 예이다. 합당한 금전적 지불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시장경제에 맡겨두면, 외부경제는 과소 생산되게 되고 외부불경제는 과다 생산되게 된다. 이 때문에 외부효과에는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 외부불경제에 포함되는 것중에서, 생명체의 개체수 격감과 멸종, 삼림파괴 등과 같은 **환경 파괴**는 인류의 생존이 달린 중요한 문제이다. 돈을 내고 사서 개별적으로 소비하는 재화를 **사적재**(private goods)라고 한다. 대개의 재화는 사적재이다. 반면에 국방, 치안, 공공행정, 도로, 항만, 등대 등과 같은 재화들은 개인이 각자 돈을 내고 사서 소비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돈을 지불하지 않고 함께 소비한다. 이런 재화를 **공공재**(public goods)라고 한다. 사적재와 달리, 공공재는 시장에서 돈을 받고 팔 수가 없으므로 시장에 맡기면 생산이 안되거나 부족하게 되므로 정부생산이 불가피하다.

이상과 같은 시장의 실패를 치유하고자 자본주의경제에서 정부의 경제개입이 시작되었다. 1929년에 시작된 1930년대 대공황으로 시작된 정부의 경제개입은 2차대전 이후 복지국가의 등장으로 본격화되었다. 시장의 성공과 실패가 있듯이 정부의 경제개입에도 성공과 실패가 나타났다. 2차대전 이후 구미 복지국가처럼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여 불황, 빈곤, 독과점의 횡포, 공해 등과 같은 시장의 실패를 상당히 해결한 것을 **정부의 성공**(government success)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경제개입은 동시에 폐해 내지 부작용도 낳았다. 공무원과 정치인들의 무능과 부패, 과다한 정부규제로 인한 효율성의 하락과 같은 정부개입의 부작용을 **정부의 실패**(government failure)라고 부를 수 있다. 2차대전 이후 비대해진 구미국가들의 정부의 실패를 비판하고 등장한 것이 현대 신자유주의이다. 시장도 정부도 모두 장단점을 갖고 있는 불완전한 것이 아니므로 경제를 정부와 시장 어느 하나에 전적으로 맡길 수 없다.

지금까지 본 시장과 정부의 성공과 실패는 모두 경제에 국한된 것이다. 이제부터 시야를 넓혀서 정치, 사회, 문화 등 비경제적 부문까지 생각하여 보자. 자본주의는 경제만이 아니라 비경제 부문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여 왔다. 자본주의는 부르주아지라는 새로운 사회주도계층을 창출하여 시민혁명이 성공되도록 하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근대 제도가 정착되게 하였다. 자본주의가 탄생시킨 자유주의의 확산으로 인권과 자유가 실현되고 차별이 많이 사라졌다. 또한 부르주아지라는 새로운 소비계층을 창출해 냄으로써 문화예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켰다. 이러한 비경제부문에서의 자본주의의 공헌을 앞서 본 시장의 성공과 합하여 자본주의의 성공이라고 부를 수 있다. 즉 **자본주의의 성공**(capitalism success)은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등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한 자본주의의 순기능을 말한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비경제부문에 나쁜 폐해들도 낳았다. 금권정치, 이기주의와 배금주의의 만연, 가족 등 공동체의 파괴, 이들로 인한 인간성의 황폐화, 경제적 동기에 의한 전쟁

의 빈발 등이 그것이다. 시장의 실패에 이와 같은 비경제부문에서의 자본주의의 폐해를 합쳐서 자본주의의 실패라 부를 수 있다. 즉 **자본주의 실패**(capitalism failure)란 자본주의가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등 사회 전반에 초래한 폐해를 말한다.

다음 정부의 역할 증대가 정치, 사회, 문화 등 비경제 부문에 미친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보자. 인권 보호, 국방의 완성, 문화 창달과 같이 정부 내지 국가의 노력이 비경제부문에서 국민들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러한 비경제부문에서의 정부의 기여를 정부의 성공과 합한 것이 국가의 성공이다. 즉, **국가의 성공**(state success)이란 경제만이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등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의 정부가 기여한 순기능을 말한다.

정치, 사회, 문화 등 비경제부문에서 정부는 국민 생활에 폐해를 낳기도 한다.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 유린, 치안 실패, 국방 실패, 사법부의 불공정한 법 집행, 언론 탄압, 교육과 문화의 왜곡 등이 그러하다. 독재국가나 후진국은 물론이고 현대 선진국에서도 정도는 덜하지만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이나 특정 이익집단들의 압력에 의해서 의회와 행정부가 특정 소수 집단에 유리한 정책을 시행하여 국가가 전국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민주주의의 실패**(democracy failure)가 광범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비경제부문에서의 정부의 부정적 폐해를 경제부문에서 나타나는 정부의 실패에 더한 것, 곧 사회 전 부문에서 나타나는 정부의 폐해를 **국가의 실패**(state failure)라고 부르자. 현대의 신자유주의자들이 비판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실패가 아니라 이보다 범위가 넓은 국가의 실패이다.

## 7. 정치적 자유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

앞 5절에서 본 것처럼 자유주의는 진보성과 반동성을 모두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자유주의가 과연 무엇인지 모르는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혼란은 자유주의를 정치적 자유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로 구분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자유주의는 우선 윤리적 자유주의, 정치적 자유주의 및 경제적 자유주의의 셋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세 가지 자유주의 중에서 윤리적 자유주의는 롤즈가 **포괄적 자유주의**(comprehensive liberalism)라고 부른 것에 해당할 것이다. 이는 개인의지의 자율성을 최우선시하는 가치관(인생관)을 말한다. 롤즈가 말한 바와 같이 칸트와 밀이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Rawls, 장동진 역, 37쪽, 78쪽). 개인 가치관은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할 문제이므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정치적 자유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의 둘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유주의는 근대 유럽에서 르네상스, 종교전쟁 및 시민혁명의 과정에서 형성된 부르주아들의 사회이념이다. 평민에 속하였던 이들은 신분차별의 철폐와 만인의 사회적 평등, 종교와 사상과 출판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사유재산권을 포함한 개인 인권의 보장 그리고 자유의 전제인 관용을 주장하였고, 이런 자유를 보장하는 사회제도로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주장하였다. 이런 내용은 모두 정치적 자유로 포괄할 수 있으므로 이런 주장을 **정치적 자유주의**(political liberalism)라고 부르자<sup>18)</sup>. 인간의 불완전성의 인정, 인권 보장, 만인평등, 사상과 비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관용 등이 정치적 자유주의의 주요 원리들이다.

종교개혁과 시민혁명에 성공함으로써 정치적 자유를 획득한 부르주아들은 경제활동에서

---

18) 롤즈는 다양한 가치관을 인정하는 관용을 핵심으로 하는 윤리적 자유주의를 정치적 자유주의라고 불렀다. Rawls, 장동진 역.

의 자유도 주장하게 되었다. 시민혁명이 성공하기 이전 대략 15세기에서 18세기까지 서구에서 나타났던 중상주의 경제정책은 정부의 비호를 받는 대상공인들에게는 유리하였으나 그렇지 못한 중소상공인들에게는 불리하였다. 그리하여 중소상공인들은 정부의 경제규제를 철폐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장사할 수 있는 자유방임의 경제를 원하게 되었다. 경제활동의 자유를 주장하는 이런 주장을 **경제적 자유주의**(economic liberalism)라고 부를 수 있다. 즉 경제에서의 **자유방임주의**(laissez faire)가 경제적 자유주의이다. 스미스의 『국부론』은 경제적 자유주의를 구미에 널리 보급시켰다. 시민혁명이 성공한 이후 중소상공인들이 정치 주도권을 잡음에 따라 중상주의가 몰락하고 자유방임주의 경제정책이 구미에서 전반적으로 실시되었다. 서양에서 19세기는 대체로 경제적 자유주의시대였다.<sup>19)</sup>

16세기에서 19세기 전반까지의 **고전적 자유주의**(classical liberalism)는 정치적 자유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를 모두 포함하였다. 그러나 19세기 후반부터, 빈부격차와 불황과 같은 시장의 실패가 분명히 인식되면서 경제적 자유주의는 비판받기 시작하면서, 사회적 자유주의, 질서자유주의, 복지국가의 자유주의 등, 고전적 자유주의를 비판하는 다른 자유주의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sup>20)</sup>.

일반적으로 정치적 자유주의는 보편타당성을 인정받고 있다. 신분차별의 철폐와 만인평등, 개인인권의 절대적 보장, 건전한 개인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통한 정치권력(국가권력)의 제한, 사상과 비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그리고 관용의 증시,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등과 같은 정치적 자유주의의 기본원리들과 제도들에 대해서는 모든 자유주의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다수의 횡포나 의회의 타락과 같은 민주주의의 실패가 존재하지만 정치적 자유주의의 기본원리와 제도들에 대해서는 어느 자유주의자도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특히 모든 개인은 사회적으로 평등한 권리와 존엄성을 갖고 있다는 정치적 자유주의의 기본 관점은 항상 역사를 진보시키는 힘찬 생명력을 갖고 있다. 19세기 이후 구미에서 신분, 인종, 성, 재산 등을 이유로 자행되어 오던 차별이 점차 철폐되어 오고, 어린이, 여성과 노동자의 권익과 공공복지제도가 계속 확대되어 온 것은 모두 만인평등이라는 정치적 자유주의의 기본원리가 실현되어 온 것이다.

반면에 경제적 자유주의는 19세기 이래 끊임없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로 인해 자유주의자들은 경제적 자유주의를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의 두 그룹으로 나뉜다. 고전적 자유주의자나 현대의 신자유주의자들은 경제적 자유주의를 찬성하는 반면에, 19세기 후반 밀로 시작된 사회적 자유주의, 2차대전후 서독의 질서자유주의자들은 경제적 자유주의를 비판하고 일정한 제한을 가할 것을 주장한다. 케인지안<sup>21)</sup>과 같은 개입주의자들도 경제적 자유주의를 반대하고 정부의 적극적 경제개입을 찬성한다.

자유주의자이냐 아니냐는 경제적 자유주의가 아니라 정치적 자유주의의 지지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보편적 진보성이 있는 정치적 자유주의인 반면에 경제적 자유주의는 시대 상황을 고려하여 비판적으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부터 자유주의와 정치적 자유주의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로 한다.

19) 완전한 자유무역을 실시되었던 것은 19세기 중반 30년 정도의 영국뿐이었지만, 경제적 자유주의는 19세기의 시대정신이였다.

20) 사회적 자유주의, 질서자유주의 및 복지국가 자유주의 등 자본주의 경제정책의 변화에 관해서는 이근식(2005)의 3장 참조.

21) 케인즈(J. M. Keynes)는 그의 『고용, 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이론』(1936)에서 정부의 경제개입의 필요성을 이론적으로 밝혔다. 그 이후 정부의 경제개입을 지지하는 경제학자들을 케인지안이라고 부른다.



## 8. 자유방임주의와 개입주의의 역사적 교대

자본주의 경제정책은 개입주의와 자유방임주의를 교대로 왕복하여왔다. 대략 15세기에서 18세기까지는 전형적인 개입주의인 중상주의가, 19세기에는 자유주의가, 19세기 말부터 1930년대의 대공황기까지의 과도기를 거쳐서 대공황기 이후 194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는 다시 개입주의인 복지국가 정책이, 1980년대부터는 다시 자유방임주의에 가까운 신자유주의가 지배적 조류가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중상주의(mercantilism)**는 전형적인 개입주의 경제정책이다. 국민국가간에 영토전쟁이 계속되었던 15-8세기 유럽에서는 부국강병을 목표로, 밖으로는 보호무역정책(수입규제와 수출장려)을, 안으로는 영업허가, 가격규제, 금리규제 등의 경제통제정책을 강력히 실시하였으며, 독점적 국영기업을 직접 경영하고 도로, 항구 등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여 경제운동을 국가가 주도하였다. 민간부문의 발전이 미약한 근대화 초기에는 인력, 자본, 조직, 정보 등 모든 면에서 민간부문보다 더 풍부한 자원을 갖고 있는 정부가 경제발전의 주역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면이 있다. 중상주의단계 하에서 인구와 생산이 증가하고 사회간접자본이 건설되고 근대 국민국가가 형성되고, 근대적인 사회경제제도가 발전하였다.

중상주의는 자본주의경제가 발전할수록 발전의 질곡으로 변하게 되었다. 스미스가 지적한 바와 같이 중상주의는 본질적으로 제한과 통제의 학설이므로(Smith, 『국부론』 하, 159쪽),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경제와 모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중상주의 경제규제가 정부와 결탁한 대상공인들에게는 유리하고 중소상공인들에게는 불리하여서 정치의 새로운 주도층으로 등장한 중소상공인들은 중상주의 정부규제 철폐를 요구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정부규제들은 대부분 철폐되고 19세기는 경제적 자유주의의 시대가 되었다. 19세기에 서양 자본주의경제는 자유방임의 경제정책을 기반으로 하여 인류최초의 공업화를 달성하고 전세계를 자신들의 경제영토로 삼았다.

그러나 한편으로 빈부격차, 주기적 불황과 실업의 증대, 독과점화와 중소기업의 몰락과 같은 시장의 실패가 등장하게 되었다. 산업혁명 이후 자본가들은 부유하게 되었으나 19세기말까지도 노동자계급은 끔찍한 노동조건과 비참한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주기적 불황은 노동자계급만이 아니라 자본가계급에게도 고통스러운 시기를 안겨 주었다. 1825년 영국에서 최초의 불황이 발생한 이후 약 10년을 주기로 회가 거듭될수록 불황의 정도와 기간은 점차 확대되었다. 1873년에 발생한 최초의 세계적 대불황은 무려 20년이 넘게 지속되어 ‘**대불황기**’(the Age of the Great Depression)라고 불리운다. 이 대불황을 계기로 구미에서, 자유무역정책은 퇴조하고 보호무역주의가 부활하기 시작하여 **제국주의(imperialism)**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대내적으로는 독점자본의 팽창, 대외적으로는 무력을 앞세운 식민지확대와 구미 열강간의 전쟁이 제국주의의 특징이었다. 1870년대에서 1929년 대공황이 발생하기까지의 약 반세기는 자유주의가 개입주의로 넘어 가는 과도기였다. 제국주의시대에 대외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가 시행되었으나 국내적으로는 대체로 자유방임정책이 계속되었다.

그후 1929년부터 시작된 1930년대의 대공황에서 벗어나고자 구미 나라들은 적극적으로 재정지출과 통화발행을 확대하게 되면서 개입주의는 1970년대까지 지속되었다. 이 시기의 개입주의 경제정책을 **신중상주의**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시기에 구미각국 정부는, 시장의 실패를 시정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개입정책을 실시하였다.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공복지제도를 확대하고 불황과 실업확대를 막기 위하여 통화 발행과 재정지출을 확대하였으며, 독과점과 공해를 막기위해 적극적 규제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무상이거나 저렴한 각급 공립의 학교와 병원들을 건립하여 운영하였다. 이 결과로 시장의 실패는 상당히 감소되었고 2차대전 이후 70년대까지 심각한 사회갈등이나 불황도 없이 사상 유례없는 장기번영을 누렸다. 정부의 성공의 전형이다.

구미에서 20세기 초에 10% 미만이던 총국민소득에서의 정부예산 비중은 1970년대에 40% 이상 60%로 크게 증가하였다. 세상 만사가 그러하듯이 정부 규모의 확대는 양날의 칼이었다. 정부의 성공이 실현되는 한편으로 국가의 실패가 누적되어 왔다. 현대의 민주국가에서 정부는 공평무사하고 전지전능하다고 암묵적으로 가정하고<sup>22)</sup> 정부에게 많은 역할과 권력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현실은 이 가정과 거리가 멀다. 정보부족, 다수의 횡포, 정치인과 관료들의 이기주의, 정부의 독점성 등의 이유로, 민주선진국인 현대 구미선진국들에서도 국가의 실패가 심각하게 발생하였다. 이 결과 1980년 경부터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국가의 실패를 비판하는 현대의 **신자유주의**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들은 국가의 실패를 고치기 위하여 정부의 축소와 고전적 자유방임주의 경제정책로 복귀할 것을 주장한다.

이상과 같이 자본주의국가의 경제정책은 방임주의와 개입주의를 교대로 반복하여 왔다. 자유방임정책하에서 시장의 실패가 심화되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개입주의로 전환되고 개입주의하에서의 정부의 실패가 누적되면 다시 자유방임주의로 전환하는 역사가 되풀이되어 온 셈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현 신자유주의도 영원히 지속될 수 없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신자유주의하에서 자본주의의 실패가 심화되어 대중이 감내하기 힘들 정도가 되면 다시 개입주의가 다수의 지지를 받고 복귀하게 될 것이 예상된다. 현대 국가들에서 경제는 자본이 지배하지만 민주주의 선거 덕분에 정치에서는 사람 숫자가 힘을 발휘할 수 있다. 현대 국가에서 금권정치가 막강한 힘을 발휘하지만 빈부격차가 계속 악화되면 생활이 어려워진 대중의 압력이 다시 개입주의를 불러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 9. 현대 신자유주의의 의미와 내용

과거 두 번의 신자유주의가 있었다. 첫 번째는 그린(T. Green)과 홉하우스(Leonard T. Hobhouse)로 대표되는, 19세기말과 20세기 초 영국의 **사회적 자유주의**(social liberalism)이고, 두 번째는 오위켄을 대표로하는 2차대전 후 서독의 **질서자유주의**(Ordo Liberalismus)이다.

사회적 자유주의는, 밀의 진보적 성향을 더욱 발전시켜서, 빈곤이 자유의 주된 적이라고 보고 빈곤 퇴치를 위한 적극적인 사회개혁을 주장하였다. 이 주장은 19세기말과 20세기 초에 영미에서 큰 세력을 떨쳤다. 이 시절 영국에서 「보수당」과 정권을 다투었던 「자유당」의 이념이 사회적 자유주의였다. 이 때부터 영미에서 liberal이란 말이 자유롭다는 뜻과 함께 진보적이란 의미를 갖게 되었다.

2차대전 직후 서독은 완전한 폐허에서 라인강의 기적이라는 경제부흥을 이룩한 자신들의 경제체제를 **사회적 시장경제**(die sozialen Marktwirtschaft)라고 불렀다. 이것은 오위켄의

22) 케인즈와 같은 사심 없고 현명한 인사들에 의하여 정부가 운영된다는 가정을 ‘하비가의 전제’(the Harvey Road Presupposition)이라고 한다. 하비는 케인즈 같은 캠브리지대학 교수들이 모여살던 동네이다.

질서자유주의에 강력한 사회보장제도를 합친 것이다. 오위켄은 독점과 인플레이가 불황, 실업, 빈곤, 자원낭비 등 모든 경제폐해의 주 원인이라고 보고 엄격한 통화관리를 통한 물가 안정에 더하여 엄격한 독점금지도 추가된 **경쟁적 경제질서**의 확립만 정부가 책임지고 경제과정(경제활동)은 완전한 민간자유에 맡기라는 **질서자유주의**를 주장하였다. 독점과 인플레이를 경제의 주된 적으로 본 것은 독점화와 초인플레이라는 독일의 혹독한 경험을 반영한 것이다. 독일은 철저한 통화관리를 시행해 온 점에서 신축적인 통화관리를 해 온 영미 등과 다르다. 1980년대에 등장한 현대의 신자유주의는 세 번째 신자유주의인 셈이다. 이제부터는 통례에 따라 현대 신자유주의를 그냥 신자유주의라고 부르자

1979년에서 1990년까지 집권하였던 영국의 수장 대처(Margaret Thatcher)와, 1980년에서 1988년까지 재임하였던, 미국의 대통령 레이건(Ronald Reagan)은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규제철폐, 공기업의 민영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의 정책을 실시하였고 이는 미국의 막강한 영향력을 배경으로 세계화의 흐름을 타고 현재 전 세계의 지배적인 사조로 자리잡았다. 노동시장 유연화는 그간 비대해진 노동조합에 대한 비판과 반감을 반영한다.

영미 경제학에서의 신자유주의를 선도한 사람이 하이에크와 프리드만(Milton Friedman)과 부캐난(James Buchanan)이다. 신자유주의 정책이 흥미하기 훨씬 전에 하이에크는 1930년대부터, 프리드만과 부캐난은 1950년대부터 개입주의를 비판하여 자유방임 경제정책을 주장하는 자신들의 이론을 발표하여 왔다. 이들의 구체적 이론들은 서로 다르나 이들의 공통된 주장을 정리해 보자<sup>23)</sup>.

첫째는 **국가의 실패에 대한 비판**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국가의 실패는 정부의 실패에 정치, 사회, 문화, 법률적 측면에서의 국가의 잘못까지를 더한 것이다. 이들이 비판하는 국가의 실패는 후진국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발달한 선진국에서의 국가의 실패이다. 케인즈와 그의 주장을 따르는 케인지안들은, 현대 구미선진국에서는 민주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어서 국가의 실패가 없을 것이라고 과신하였다. 그러나 현실은 이들의 생각이 잘못임을 보여주었다. 물론 2차대전 이후 구미선진국에서 장기번영이라는 국가의 성공도 나타났지만 실패도 나타났다.

둘째로 이들은 국가의 실패를 시정하기 위하여, **국가(정부)의 기능과 권한의 축소와 시장의 확대**를 주장한다. 세금의 감축, 통화남발과 적자재정의 금지, 정부기구의 축소, 재정적 인 경제정책의 금지, 공기업의 민영화, 경제규제의 축소, 무역과 자본거래 등 대외거래의 자유화, 노동자보호의 축소를 통한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이 모두 이에 속한다. 노조의 약화가 노동시장의 유연화의 중요한 내용이다.

셋째로 **복지제도의 축소**이다. 2차대전 이후 확대된 공공복지제도는 정부재정을 팽창시킬 뿐만 아니라, 근로의욕을 감소시키는 복지병이라는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보고 이의 축소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복지제도의 축소이지 폐지는 아니다. 이들도

23) 현대 신자유주의의 경제정책을 잘 요약한 것이 워싱턴 콘센서스(the Washington Consensus)이다. 이는 미국의 존 윌리엄슨이 중남미의 경제개혁에 대한 미국의 권고안을 정리한 그의 글(John Williamson, "What Washington Means by Policy Reform", in J. Williamson ed., *Latin American Adjustment: How Much Has Happend?*, Washingt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1990)에서 처음 명명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의 열 가지이다. 균형재정, 높은 경제수익율과 소득분배의 잠재적 개선효과가 큰 부문(기초 건강관리, 기초교육 및 사회기간시설 등)으로의 재정지출 우선순위의 전환, 한계세율을 높이고 세원을 확대하는 세제개혁, 이자율 자유화, 환율 현실화, 무역자유화, 외국인 직접투자 도입 자유화, 민영화, 규제철폐(진입과 퇴출 장벽의 제거), 사유재산제도의 확립. J. Williamson(2001), 3쪽.

기본적 공공복지제도는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로 세계화의 물결을 타고 신자유주의는 **전세계로 전파**되고 있다. 이것은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소련 몰락 후 미국 영향력이 강화되어 신자유주의를 세계로 확대시키기가 용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미국이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금융업과 서비스업의 시장개방은 미국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둘은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국가의 실패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어 온 것이다. 후진국에서는 민주주의가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의 실패가 선진국에서보다 훨씬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결과 후진국들에서도 신자유주의가 쉽게 수용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우리나라도 이에 해당한다.

신자유주의자들이 비판하는 것은 정부의 실패가 아니라 이보다 범위가 더 넓은 국가의 실패를 비판한다. 부캐난의 '정치에서의 **그래섬의 법칙**(Grasham's Law in Politics<sup>24</sup>)은 민주국가에서 고위 공직자들 중에 윤리수준이 낮은 부패한 사람들이 많은 이유를 재미있게 설명하였다. 윤리수준이 낮은 사람일수록 고위직의 예상수익률이 높다고 생각하여 출세를 위하여 더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Buchanan, 64쪽) 그러나 현대 민주국가들에서 국가의 실패 내지 민주주의의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금권정치**일 것이다. 대자본들이 정치자금 지원을 통해 정계만이 아니라 언론계, 학계, 법조계 등에도 직간접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1인1표의 보통선거에도 불구하고 국민대다수가 아니라 대자본들을 위한 정책들이 집행되는 경우가 많다.

## 10. 신자유주의의 폐해

신자유주의는 그간 누적되어 온 국가의 실패를 해소하는 데에 공헌하여 왔다. 그러나 반면에 자본주의의 실패를 누적시켜 오고 있다. 개별정부의 노력으로 그간 어느 정도 억제되어 오던 시장의 실패가 세계화로 인하여 개별정부의 경제장악력이 크게 축소됨에 따라서 고삐 풀린 말처럼 그대로 표출되고 있다. 자본 자유화로 투기자본들이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게 되면서 모든 국가들이 금융위기와 그로 인한 경제불안에 그대로 노출되게 되었다. 신자유주의 자본자유화의 주도 세력은 미국 금융자본을 대표하는 월가와 미국 재무부와 IMF의 복합체'(the Wall Street-Treasury-IMF Complex)이며 이들은 미국금융자본의 이익을 도모한다.

이들이 자본자유화를 이용하여 막대한 이익을 본 대표적 예가 우리나라의 1997년 외환위기였다. 1997년 우리나라 은행들은 상환할 단기 외채 총액에 비하여 보유외환이 부족한 사태에 빠졌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외환을 빌려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일본 정부도 수락하였던 것을 미국 재무부가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압력을 넣어 못 주게 하였다. 할 수 없이 우리정부는 미국 재무부가 요구하는대로, 자본시장 완전 개방, 고금리 정책, 초재정긴축정책, 광범위한 고강도 구조조정의 실시를 약속하였고, 그 대가로 미국 재무부는 우리 단기외채의 상환기간 연장과 IMF 차관 제공을 주선해 주어 우리가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외환위기로 달러의 원화 가격은 두 배 이상으로 뛴 반면에 우리나라 주식가격은 절반 이하로 떨어져서 외국자본들은 평소의 1/4 이하의 헐값으로 우리나라 모든 우량기업의 주식의 절반이상을 쓸어 갔다. 또한 금리가 폭등하고 기업과 은행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서

24) 과거 금화나 은화를 화폐로 쓰던 시절에 사람들이 금이나 은이 백%인 양화는 집에 보관하고 금은이 조금만 들어간 악화만 지불에 사용하여 유통에서 악화가 양화를 쫓아내는 현상을 경제학에서 **그래섬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실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증하여 우리 국민들이 몇 년 동안 큰 고통을 겪었다.

결국 미국은 그냥 두면 동아시아내에서 해결될 유동성 부족사태를 IMF로 가게 해서 사실상 외환위기를 “일으킨 뒤”, 자신의 요구사항을 철저히 관철시키고 해결해 준 셈이다. 병 주고 약 주면서 약값을 많이 받아낸 꼴이다. (이제민, 134쪽)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신자유주의로 인해 경제와 사회가 황폐해졌다. 특히 노동시장유연화는 비정규직과 실업의 양산과 임금하락을 초래하였다. 우리나라의 끝모르는 출산율과 결혼율 감소, 이혼율과 자살률 증가, 전세계 난민의 급증 등이 모두 신자유주가 초래한 자본주의의 실패가 낳은 사회와 인간성의 황폐화의 결과라고 생각된다. 오위켄 말대로 집단은 양심이 없지만(Eucken, 안병직·황신준 역, 253쪽) 자본도 양심이 없다. 이런 황폐화 현상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수는 없을 것이다.

## 11. 자유주의의 한계와 상생의 원리

자유주의도 다른 이념들과 마찬가지로 결정적 한계를 갖고 있다. 자유주의의 개인주의 원리로는 인간소외와 윤리의 타락, 사회갈등, 자연파괴와 같은, 현대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자본주의 실패를 해결할 수 없다. 이런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는 다른 원리가 필요한데 상생의 원리가 그것이라고 생각된다.

### 1) 사회적 갈등 문제

사회문제는 개인이 결정하는 개인 문제와 사회구성원들이 공동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회적 문제의 둘로 나눌 수 있다. 직업, 종교의 선택이 전자이며, 국가 경영과 같이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후자이다. 후자의 문제를 경제학에서 **사회적 선택**(집단적 선택 혹은 공공선택; social choice, collective choice, public choice)의 문제라고 부른다. 사회적 선택의 문제들을 **공동의 문제**<sup>25)</sup>라고 부르자. 시대나 체제에 상관없이 존재하는 공동의 문제로서, 사회질서의 유지(국방, 치안, 사법), 공공시설(교통시설, 통신시설, 상하수도 등)의 건설, 기초교육 공급, 기본적 사회보장 등의 문제들이 있다. 자본주의의 실패(불황과 실업, 빈부격차 확대, 독점화, 환경파괴, 인간성과 사회의 황폐화, 전쟁과 약소국 침탈 등)에 대처하는 것도 공동의 문제이다. 세계화로 인하여 자본주의의 실패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공동의 문제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개인 간에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주의로 해결이 가능한 경우이고, 둘은 개인간에 이해상충이 발생하여 개인주의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이다. 공동의 문제라도, 질서 유지, 필수적인 공공시설의 건설, 불황의 해결 등과 같이 그 해결이 모든 구성원들에게 이익이 되는 문제는 개인간 이해상충이 없으므로 개인주의로도 이의 해결이 가능하다<sup>26)</sup>. 그러나 개인간에 이해 상충이 발생하는

25) 종교의 선택과 같은 개인적으로 결정할 문제도 사회적 문제라고 부르므로 이와 구분하기 위해 공동의 문제라고 부르자.

공동의 문제에서 개인주의는 현실적 차원에서도 원칙적 차원에서도 해결방향을 제시할 수 없다. 분배문제, 독과점, 환경훼손, 인간소외, 약소국 침탈, 전쟁 등과 같이 개인간 이해상충이 존재하는 공동의 문제를 **사회적 갈등 문제**라고 부르자.

사회적 갈등 문제를 개인들간의 자발적 합의에 의해 해결할 수 없다는 자명한 사실을 애로우(Kenneth Arrow)의 **불가능성 정리**(the impossibility theorem)는 수학적으로 엄밀히 검증하였다(Arrow). 돈이 한정되어 있어서, 사과나 배, 둘 중 하나밖에 살 수 없는데, 나는 사과를, 너는 배를 사고 싶은 상황에서 양보도 강압도 없이 두 사람이 무엇을 살지 합의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부캐난은 합의로 이익을 보는 사람의 이익이 합의로 손해를 보는 사람의 손해보다 크다면 이익을 보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사람에게 손해액 만큼 보상을 해주면 자발적인 전원 합의를 얻을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순이익이 발생함을 지적하였다.(Buchanan & Tullock, 125-8쪽) 이런 부캐난의 해결방법 역시 비현실적이다. 수혜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실제보다 줄여서 말할 것이고,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를 부풀려서 말할 것이므로, 합당한 보상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며, 또한 합의에 도달하기 까지는 시간적 금전적 비용인 협상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개인간의 이해상충을 해결하는 유명한 방법은 롤즈의 **최대최소의 규칙**(Maximin Rule)이다.(Rawls, 황경식 역, 3장) 롤즈는 누구나 자신의 처지를 모르고, 또한 위험기피자라고 한다면, 누구나 자기가 가장 불우한 사람이 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가장 불우한 사람의 이익을 최대로 하자는 최대최소의 규칙에 합의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롤즈의 이론도 비현실적이다. 현실에서는 모두가 자신의 처지를 잘 알고 있으므로 모두가 자신의 처지를 모른다는 그의 **무지의 장막** 가정은 현실의 이해상충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회피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개인주의의 원리가 아닌 다른 원리가 필요하다.

## 2) 상생의 원리

자유주의의 개인주의가 간과하는 것은 인간생활에서의 공생(共生)이라는 측면이다. 우리들은 공간적으로 가족과 친척, 친지, 국민, 나아가서 모든 인류 및 동식물들을 비롯한 자연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시간적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선조와 후손과 공생하고 있다. 내가 살고 있는 사회와 자연은 나의 선조들이 물려준 유산이며, 후세의 사람들은 나와 우리가 남긴 유산을 물려받아 살아간다.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나는 무수한 다른 존재들과 함께 공생하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은 공생의 망으로 연결되어 있다. 경제적으로 우리는 분업과 협업의 망을 통해 전 세계 사람들과 함께 협력함으로써 필요한 물자들을 공급받고 있다. 정치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우리는 전 세계 사람들과 서로 얽혀서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삶의 기쁨과 보람을 얻는 것도 공생 덕분이다. 자신 말고 그 어떤 사람도 생명체도 존재도 없는 세상에서 혼자 산다면 우리는 아무 기쁨과 보람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돈과 명예와 권세도 모두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 때문에 귀한 것이지, 혼자만 사는 세상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우리의 생활이 가능한 것도, 우리가 생의 보람과 낙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동식물들과 산하와 공생하는 덕분이다.

---

26) 현실에서, 이의 실행을 위한 경비의 부담이라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상생(相生)의 원리**란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생명 및 모든 존재들의 소중함을 인정하고 이들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이들과 서로 아끼고 도우면서 함께 살아감을 말한다.<sup>27)</sup> 이러한 상생의 원리에서 우리는 사회적 갈등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은 개인성(개체성)과 사회성(공생성)의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있는데, 개인성에서의 원리를 자유라고 한다면, 사회성에서의 원리를 상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상생의 원리는 전체주의와 관계없다. 전체주의는 국가나 집단을 우선시하여 이를 위한 개인의 희생을 당연시하지만, 상생의 원리는 이를 반대한다는 점에서는 개인주의와 같다. 상생의 원리는 자유주의의 관용의 원리와 공동체주의의 관점을 더 확대한 셈이다.

### 3) 상생의 갈등과 적대적 갈등

현재 우리나라에는, 노사갈등, 빈부갈등, 지역갈등, 세대 갈등, 농민과 소비자 갈등 등 여러 심각한 사회갈등을 겪고 있다. 상생의 원리에서 이런 사회갈등을 해결하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개인간이나 집단간의 차이는 갈등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풍요와 다양함의 원천이기도 하다. 차이는 불가피하게 갈등을 낳지만 갈등은 생명의 유지와 발전에 필수적이다.

모든 인간사에 있어서, 서로 생명력을 갖기 위해, 그리고 그들의 고유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서로 갈등하는 영향력(conflicting influences)**이 필요하다. . . . . 만일 배타적으로 하나의 목표만 추구한다면 하나는 과다하게 되고 다른 것은 부족하게 될 뿐만 아니라, 원래 배타적으로 추구하던 목적도 부패하거나 상실하게 될 것이다.(Mill, 『정부론』, 292쪽)

갈등과 모순에서 발생하는 긴장관계를 통하여 양쪽 모두 타락과 안일에 빠지지 않고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유지하고 발전할 수 있다. 이기심과 이타심 어느 하나만 존재하는 사회는 유지될 수 없을 것이며, 평등에 대한 고려 없이 자유만의 추구는 자유를 타락시킬 것이며, 자본주의경제와 사회주의경제의 어느 하나만으로 경제를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며, 개입주의 위주의 경제정책과 방임주의 위주의 경제정책은 시대에 따라서 교대하여 왔다. 이상을 추구하는 진보주의자 없이 현실에 안주하는 보수주의자들만이 존재하는 사회는 발전할 수 없을 것이며, 보수주의자들의 신중함과 현실성 없이 진보주의자들의 이상주의만으로 추진되는 개혁은 시행착오와 혼란을 초래할 것이며, 노인의 경험과 청년의 패기가 서로 보완하지 않는 사회는 병든 사회일 것이며, 노동자와 자본가 어느 한 쪽 만으로는 기업 경영이 불가능할 것이며, 다른 지역과의 교역과 협력 없이는 어떤 지역도 열악한 생활의 질을 면치 못할 것이다. 상생 없는 자유는 소외와 갈등에 함몰될 것이고, 자유 없는 상생은 개인의 매몰을 초래할 것이다. 갈등을 상생의 갈등으로 승화시킬 때, 갈등은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당신은 좌익이나 우익이냐라는 질문을 받고, 잭슨(Jesse Jackson)목사는 “새는 양쪽 날개로 날아갑니다.”라고 답하였다고 한다. 이와 같이, 서로 도움이 되는 갈등을 **상생의 갈등**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상생의 갈등과 반대되는 **적대적 갈등**도 많다. 이는 상대방을 상생의 대상이 아니라 타도

27) 원래 상생이란, 공자가 정리한 서경(書經)에 나오는 오행설(五行說)이 가리키는 현상, 즉, 쇠는 물을, 물은 나무를, 나무는 불을, 불은 흙을, 흙은 다시 쇠를 낳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서 상극(相剋)에 반대되는 말이지만, 여기서는 요즘 통용되는 의미로 사용한다.

나 강탈의 대상으로 보는 갈등이다. 계층간, 지역간, 노사간, 세대간 갈등 등 여러 갈등들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상생의 갈등이 아니라 적대적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적대적 갈등의 원인은 제로섬게임과 집단이기주의의 돌일 것이다. 전체의 몫이 한정되어 있어서, 한 쪽의 몫이 커지면 다른 쪽의 몫이 작아지는 **제로섬게임**에서 분배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지면 불만과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과거 군사독재시절, 출신지역이라는 불공정한 기준이 공직 출세의 기준으로 작용함으로써 영호남간의 지역갈등이라는 적대적 갈등이 발생하였다.

적대적 갈등의 또 하나 요인은 **집단이기주의**이다. 우리의 양심은 이해관계라는 거센 바람 앞에서 힘없이 꺼져버리는 촛불과 같다. 이 허약한 촛불을 돕는 원군이 창피를 두려워하는 우리의 창피심이다. 우리가 범죄를 잘 저지르지 않는 것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우리의 양심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발각되면 당하게 될 창피를 두려워해서이다. 창피하냐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같이 하느냐의 여부이다. 목욕탕에서 옷을 벗고, 전쟁터에서 다른 사람을 살해할 수 있는 것은, 남들이 모두 그러기 때문이다. 집단행동은 창피함을 잊도록 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오위켄 말대로 집단은 양심이 없다. 이해관계와 집단행동이 결합된 것이 **집단이기주의**이다. 집단이기주의는 인간의 이성과 양심을 마비시키는 가장 강력한 마약이다. 사회정의를 위해 투쟁한다고 식발과 단식을 감행하지만 실상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집단이익인 경우가 적지 않다. 집단이기주의를 예방하려면, 비판의 자유와 관용의 풍토를 조성하여 양심적 소수가 자유롭게 집단이기주의를 비판할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대중의 의식수준을 높여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상생의 원리를 실천하도록 하는 것 말고는 별로 대책이 없어 보인다.

#### 4) 상생의 원리 적용

여러 사회적 갈등 문제들을 상생의 원리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노사가 협력하여 생산성을 높이면 전체의 몫이 커져서 노사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다. 노사 관계를 제로섬 게임으로 보는 것은 사물을 정태적으로 보는 단견이다. 상생의 원리를 실천하면 쌍방이 나누는 전체 몫을 증대시킬 수 있으므로 국제 분쟁을 포함하여 대부분 갈등과 분쟁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윤리상실과 그에 따른 인간성 황폐화도 상생의 원리로 치유할 수 있을 것이다. 윤리타락이란 타인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것인데 반하여, 상생의 원리는 타인을 존중하고 도와주어야 함을 일깨우기 때문이다. 스미스는 무분별한 탐욕으로 인한 불의를 막기 위해 공정한 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Smith, 『도덕감정론』, 340쪽). 그러나 공정한 법만으로는 부족하다. 공정한 법은 타인에 부당한 피해를 주는 것을 금할 뿐 어려운 사람을 도울 것을 명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칸트가 말한 바와 같이 자유의지에 따라 스스로 결단하여 선택하는 도덕률이 필요할 것이다.(Kant, 최재희 역, 46-55쪽). 이는 상생의 원리의 자각과 실천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상생의 원리는 **환경보전과 자연보호**를 위한 지침이기도 하다. 지난 2백년간 인간에 의한 자연의 대량 파괴를 촉발시킨 것은 근대서양문명 안에 있는 세 가지 요소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하나는 자연을 인간의 이용 대상으로 보는 서양의 편협하고 오만한 인본주의요, 둘은 자원에 대한 수요를 폭발시킨 자본주의 경제체제요, 셋은 자연의 대량파괴를 가능하게 만든 근대의 과학기술의 발달이다. 이제 자연보호는 자연 사랑의 수준을 넘어서 인류의 생존차원에서 실천되어야 할 것 같다. 자연도 우리와 상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연 존중은 당연하



다. 근대 서양 과학문명은 자연을 수단시하여 왔다. 서양 합리주의의 시조 격인 데카르트는, 과학의 발달 덕분에 인간이 자연의 주인이자 소유자가 된다고 말하였다(Descartes, 이현복 역, 220쪽). 천지분간을 못한 망언이다. 칸트가 오늘 살아서 현대를 본다면, 인간만이 아니라 자연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하여야 한다고 말할 것 같다. 자연을 두려워하며 자연에 순응하여 산다는 과학문명 이전의 사고방식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이다. 현재와 같은 무분별한 자연파괴는, 우리가 답습하고 우주를 향해하는 지구라는 아름다운 작은 배의 밀창을 우리 스스로 뚫는 자해 행위이다. 인간만 잘 살기 위하여 다른 생명들을 마구 살육할 것이 아니라 다른 생명들도 보호하여 모든 생명이 함께 잘 살도록 노력하는 것이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도리일 것이다. 생명유지를 위해 먹는 것은 할 수 없지만 낚시와 사냥과 같이 재미를 위해 살생하는 것은 자연에 미안한 일이다.

## 12. 맺음말

자유주의는 원래 계급적 한계를 갖고 있으며, 신자유주의와 같은 경제적 자유주의는 여전히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빈부격차 확대, 대중의 생활 조건 악화, 독과점, 자살률과 이혼율의 증가, 결혼율과 출산율의 하락, 세계적 난민 증가, 환경파괴 같은 심각한 자본주의의 실패를 낳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불완전성을 인정한 기초위에서, 만인평등과 인권 존중, 사상과 비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관용,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주장하는 정치적 자유주의는 지난 5백년간 인간 역사 발전을 추진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특히 만인평등 사상은 역사발전의 원동력이다. 정치적 자유주의를 자유주의라고 부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자유주의도 분배문제, 독과점, 환경파괴, 약소국 침공과 같이 이해상충이 존재하는 사회적 갈등 문제의 해결에는 무력하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사람간에, 사람과 자연간에 서로의 권리를 인정하고 협력하며 약자를 돕는 상생의 원리가 필요하다.

시장과 정부 넓게 보면 자본주의와 국가는 모두 긍정적 면과 부정적인 면을 함께 갖고 있다. 자본주의는 근대의 경제, 정치, 문화 등 사회 전반을 발전시킨 자본주의의 성공을 이룩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심각한 자본주의의 실패를 낳고 있다. 국가도 성공과 실패를 모두 갖고 있다. 인권 보호, 질서 유지, 경제 발전 촉진 및 자본주의의 실패 시정 등은 국가의 성공인 반면에,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유린, 정부의 부패와 무능, 언론 탄압, 교육과 문화 왜곡 등과 같은 국가의 실패도 존재한다. 시대 상황에 따라서 시장과 정부의 적절한 조합을 찾아야 할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본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의 소위 진영간 대립은 매우 심하다. 이를 이념대립으로 보기도 하지만, 러시아, 중국, 북한, 큐바 정도만 빼고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자본주의를 기본으로 하면서 사회주의가 섞인 혼합경제이므로 좌우 이념 대립의 시대는 끝난지 이미 오래다. 우리나라 진영대립은 좌우 이념 대립이 아니라 계층대립인 것 같다. 대자본(대기업), 사용자, 고소득층의 입장에 서는 사람들이 보수진영, 반면에 중소기업, 근로자, 저소득층의 입장에 서는 사람들이 진보진영인 것 같다. 이런 계층 갈등은 상생의 원리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자와 사용자도, 대기업과 하청기업도 모두 서로 협력하여 총이익을 키운 뒤 합의해서 나누면 될 것이다. 최저 임금, 최대 근로시간, 사회보장제도 등 이해 상충이 발생하는 문제들은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사회합의를 통해 제대로 약자의 편을 들어 주는 것이 상생의 원리에 부합할 것이다. 모든 사람의 존엄성을 존

중하는 것이 자유주의의 원리이자 상생의 원리이다.

역사가 보여준 것처럼 방임주의와 개입주의의 경제정책은 서로 교대하여 왔다. 방임주의가 자본주의의 실패를 누적시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입주의가 등장하고, 개입주의가 국가의 실패를 누적시키면 다시 방임주의가 등장하는 정책 교대가 반복되어 왔다. 1980년대 등장한 현대 신자유주의는 2차대전 후 복지국가들에서 누적되어 온 국가의 실패를 시정하는 성과를 나타내어 왔으나 동시에 자본주의의 실패를 누적시켜 왔다. 이로 인한 신자유주의에 대한 누적된 대중들의 불만이 선거에 반영되면 신자유주의가 퇴조하고 개입주의 복지국가가 부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사회도 지구도 모두 유지되기 힘들 것이다.

앞으로 복지국가는, 일반인들의 생활 안정을 보장해 주는 공공복지제도를 강화하여야 할 것 같다. 생활이 안정되어 미래가 불안하지 않아야 자살과 이혼이 줄고 결혼과 출산이 늘 것이다. 특히 인공지능의 발달로 정신노동자의 일자리가 크게 감소할 것이므로 기본소득 확대가 불가피할 것이다. 공공복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회 전반에 상생의 풍토가 널리 정착되는 것이라 생각된다. 노사간, 기업간, 친지간에 서로 돕고 아끼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따뜻한 사회가 만들어지면 사람들이 삶의 낙과 보람도, 생의 의욕도 가질 수 있어서 독신, 이혼, 자살의 충동을 벗어날 것이다.

험악하고 각박한 우리나라 사회 분위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은 우리나라 정치지도자들이라 생각된다. 모든 정치인이 그런 건 아니지만, 매일 수시로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이들의 후안무치하고 부정직하고 몰상식하고 파렴치한 저질 언행들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의 심성과 언행도 무의식 중에 오염되고 있다. 외국에도 윤리 수준이 낮은 정치인들이 많지만 우리나라는 특히 더한 것 같다. 우리나라 삼류 정치판이 우리 사회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를 비판해야 할 학자들이 오히려 정치판을 기웃거리며 아부하며 한 몫 거드는 행태는 보기 민망하다. 삼류 정치를 추방하려면 우리 국민들이 일류가 되는 수 밖에 없다.

신자유주의의 교훈은 국가의 실패가 존재함을 일깨워 준 것이다. 이를 살려 앞으로 복지국가는 국가의 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제일 필요한 것은 금권정치를 추방하여 민주주의의 실패를 극복하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정계, 언론계, 학계, 법조계를 모두 대자본이 장악하고 있는 금권정치를 추방하여야 소수 이익집단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의 복지가 증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단체가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겠지만,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학자들이 학상이나 학노가 아닌 공정한 비판자 역할을 담당하여 여론을 선도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세계화시대의 자본주의 실패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국제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 금권정치에서 벗어나서 신자유주의를 청산하는 것이다. 이는 아직 요원한 일로 보이지만 언젠가는 실현될 것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국과 중국의 패권 갈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국제사회는 여전히 약육강식의 야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연의 이치인 약육강식을 벗어나기란 매우 힘들지만 이를 거부하고 약자를 도와주는 것이 윤리이다. 만인평등의 자유주의 원리가 국제사회에도 실현될 날이 올 것이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대중은 거짓 선동에 휩쓸려서 인종주의나 국수주의에 부화뇌동하여 사태를 해결하지 보다 더욱 악화시키기 쉽다. 1930년대 독일 나치의 등장이나 현재 유럽과 미국에서 극우파가 세력을 키워가는 것이 이를 말해 준다. 더욱이 현재 막강한 대자본이 언론계, 학계, 법조계를 장악하여 대중을 현혹하고 있어서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길게 보면

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 이성은 현실 위기의 원인을 인식하고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성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인간 본성 자체이다. 사람은 누구나 생각과 자존심과 감정이라는 본성을 갖고 있으며, 이런 본성 때문에, 역사가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인간은 자신이 수궁할 수 없는 고통을 받으면 반발하기 마련이다. 인간의 역사발전을 추동해 온 것은 이런 인간의 이성과 본성이라고 생각된다. 신자유주의가 계속될수록 결국 대중의 반발이 증가할 것이고 이는 정치적 압력으로 나타나서 미국 등 각국의 정책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이근식, 『자유주의 사회경제사상』, 한길사, 1999.  
 \_\_\_\_\_, 『자유와 상생』, 기파랑, 2005.  
 \_\_\_\_\_, 『서독의 질서자유주의 : 오위켄과 뢰프케』, 기파랑, 2007. 5.  
 \_\_\_\_\_, 『신자유주의: 하이에크, 프리드먼, 뷰캐넌』, 기파랑, 2009.  
 \_\_\_\_\_, “평등에 관하여”, 『프레스미안』, 2011.5.9.  
 \_\_\_\_\_, 『애덤 스미스 국부론』, 쌤앤파커스, 2018.  
 이재민, 『외환위기와 그 후의 한국 경제』, 한울, 2017.  
 Arblaster, Anthony, *The Rise and Decline of Western Liberalism*, Basil Blackwell, 1984.  
 Arrow, Kenneth J., “Social Choice and Individual Values”(2nd ed). Yale Univ. Press, 1963. *Contemporary Macroeconomics and Distribution*. Macmillan, 1985.  
 Berlin, Isaiah(1969), “Two concepts of liberty”, *Four Essays of Liberty*,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69.  
 Buchanan, James, *The Reason of Rules*. Cambridge Univ. Press, 1985.  
 \_\_\_\_\_ & Tullock, G., *The Calculus of Consent*. Univ. of Michigan Press, 1962.  
 Descartes, René(1637), *Discourse de la Méthode : Regulae ad Directionem Ingenii*, 데카르트, 이현복 옮김, 『방법서설, 정신지도를 위한 규칙들』, 문예출판사, 1997.  
 Eucken, Walter, *Grundsätze der Wirtschaftspolitik*. 1952 ; 안병직·황신준 역, 『경제정책의 원리』, 민음사, 1996. 이 책은 오위켄의 유고를 그의 부인 Edith와 Freiburg대학 동료교수였던 Hensel이 정리하여 출판한 것임.  
 Hayek, Friedrich A., (LLL), *Law, Legislation, and Liberty: A New Statement of the Liberal Principles of Justice and Political Econom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vol.1, *Rules and Order*. 1973.(LLL1)  
 vol.2, *The Mirage of Social Justice*. 1976.(LLL2)

- vol.3, *The Political Order of a Free People*. 1979.(LLL3)
- Kant, Immanuel, *Kritik der praktischen Vernunft*, 1788; 칸트 저, 최재희 역, 『실천이성비판』, 박영사, 1992.
- Keynes, John M.(『일반이론』),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MacMillan and Company Ltd., 1936, 조순 역,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 비봉출판사, 1985.
- Laski, Herold J. *The Rise of European Liberalism* (with a new introduction of John L. Stanley), Transaction Publishers, 1997. originally published 1936 by Allen and Unwin.
- Locke, J. *The Second Treatise of Government, An Essay concerning the True Original, Extent and End of Civil Government*. 로크/J.S. 밀, 『통치론/자유론』, 삼성문화개발, 1990.
- Mill, John Stuart,(『자유론』), *On Liberty*, 1859. 로크/J.S. 밀, 『통치론/자유론』, 삼성문화개발, 1990.
- \_\_\_\_\_,(『정부론』), : *Considerations on Representative Government*, 1861. *On Liberty and Other Essays : the World Classics*, edited with an Introduction by John Gray,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pp. 203-467.
- Plato, 박종현 역, 『플라톤의 국가, 政體』, 서광사 1997.
- Popper, Karl, *Open Society and Its Enemies*, volume I & II, Routledge & Kegan Paul,1966; 이한구·이명현 역, 『열린 사회와 그 적들』 1권과 2권, 민음사, 1982.
- Rawls, J., *A Theory of Justice*.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황경식 역, 『사회정의론』 서광사, 1985,
- \_\_\_\_\_, J., *Political Liberalism*,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3, 장동진 역, 『정치적 자유주의』, 동명사, 1999.
- Röpke, Wilhelm, *Civitas Humana; Grundfragen der Gesellschafts und Wirtschaftsreform*, Eugen Retsch Verlag, Erlenbach-Zurich, Switzerland, 1944 ; Cyril Spencer Fox역, *Civitas Humana; A Human Order of Society*, William Hodge and Company, 1948.
- Rossi, Pietro, "Scientific objectivity and value hypothesis",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Journal*, 1965, vol. 15,pp.84-98. reprinted in *Max Weber : Critical Assessments*, Peter Hamilton ed., Routledge, vol.1, pp.344-50.
- Smith, Adam(『국부론』),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1776; Campbell, R. H. and Skinner, A. S.(ed.), Cearendon Press, 1976; 아담 스미스, 김수행 역 『국부론』 上·下, 동아출

판사, 1992.

\_\_\_\_\_(『법학강의록』), *Lectures on Jurisprudence*. R. L. Meed, D. D. Raphael and P. G. Stein(eds.), *Liberty Classics*, 1982; *The Glasgow Edition of the Works and Correspondence of Adam Smith*, vol. V, Oxford University, 1978.

\_\_\_\_\_(『도덕감정론』),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1759; D. D. Raphael and A. L. Macfie(eds.), *The Glasgow Edition of The Works and Correspondence of Adam Smith*, vol. I. Oxford University Press, 1976.

Walzer, Michael, "The Communitarian Critique of Liberalism", *Political Theory*, Feb. 1990, pp. 6-23.

Williamson, John, "What Should the Bank Think about the Washington Consensus",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web-site, 2001.